

# 국민의힘 혁신위 '지지율 하드캐리' 할까

대통령·당 지지율 30%대  
혁신위 구성... 역전 노력  
당내 일부 의구심 제기도

국민의힘 쇄신안인 혁신위가 강서 보선 참패의 밴드왜건 효과를 뚫고 자당 32.2% 지지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30% 이하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당 쇄신을 위해 23일 출범을 목표로 전·현직 의원 포함해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인물을 물색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16일 발표된 뉴스토마토 자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 65.8%, 긍정 29.2%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 투표층인 '매우 잘못'은 54.6%·'매우 잘함'은 10.4%였다.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또한 더러워진 주당 46.8%에 비해 31.5%로 낮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이하로 하락한 요인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이 17.15%의 격차로 패배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즉 대중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하는 편승효과로 인해 정부와 국힘에 대해 확실한 부정 성향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힘의 윤석열 대변인은 18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론조사가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변인은 "저희가 더 잘해서 지지율이 반등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앞당기는 김기현 지도부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리"는 일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염두에 둔 듯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언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한 당정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혁신위로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6일 윤 대통령을 향해 "여당 집단 묵인 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라며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이 스스로 저주를 풀어내 달라"고 기자

회견한 바 있다. 그는 강서보선 참패 요인을 윤 정부로 바라본 것이다.

또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월께 (당을) 떠날지 남을지 선택하겠다"며 "국민의 힘이 홀로 설 결심을 해야된다"고 정부와의 선긋기를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18일 대구에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야기,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다"며 탈당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그런 행보가 대통령께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그 해법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도 호남 출신 정치인 몇몇을 끌어들여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여당이 될지를 고민하고 다뤄주어야 한다"고 말해 국힘 혁신위가 해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홍정우 기자

## 인천 청약 부적격자 4년간 6천300여 명

부적격 당첨률 수도권서 '최고'  
연평균 1천600여 명 '청약 취소'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공공 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00여 명이 '청약 취소'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허종식(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별·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부적격 당첨자수는 당첨자수(6만6920명)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 보다 높은 비율이다.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 가점 오류 3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

복 청약 및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당첨제한 244(3.8%) △특별 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 부적격 당첨 추세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청약가점 오류와 같은 실수로 인해 부적격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에도 청약홈 개편에도 불구하고,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 약 4.1배가 증가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 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 제한을 받는다.

허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기자

## '인천 상징물 관리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석정규 인천시의회 의원 발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의 계기

인천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석정규(민주당·계양3,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기존 상징물 관리와 더불어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 포함됐다.

추가적으로 도시브랜드위원회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SNS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각종 포털 또는 유튜브 등에서 인천의 연관검색어로 마계인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천시를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인천시 도시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관련 사항은 기존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일부



분과에서 다루고 있었기에 마계인천과 같이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번 상징물 관리 조례는 전부개정안은 인천시 도시브랜드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조례의 주요 목적을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두고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 의원은 "인천은 바다와 산,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실제로는 마계인천과 다르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의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삼 기자

#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촉구

도의회 북부자치도 특위  
국회 행안위 서한문 전달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7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위 위원장이 대표로 전달했으며, 이날 엄중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서한문 전달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성공적

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임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분명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강조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더민주, 인천 서구갑)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사전 완료돼야 하므로 행안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처 중 하나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했으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7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향후 국회 및 북부 시군 방문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전

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창 기자

### 여의도 소식

## 3년간 축산농가 약취 민원 4만1천 건

소병훈 의원

축산농가 약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민주당, 광주갑·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약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약취 민원은 총 4만 1617건으로 △경남 1만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인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

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약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00만톤 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학모 기자

강득구 의원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민주당, 안양만안·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81개였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현

재는 4000여 개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만9000여 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5만3053명 △2023년 9월 기준 4만 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은 △2019년 1071명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3년새 약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중도포기자 수가 1781명으로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포기자의 주요 사유는 80% 이상이 '진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포 기자

## 초·중·고 운동부 선수 중도탈락 급증

## "HUG, 대신 갇아준 보증금 10%도 회수 못해"

김학용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약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민의힘, 안성·사진)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약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갇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

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약성 임대인이다. 약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 명, 많게는 140여 명이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354억원보다 320억 원 늘어난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면적액의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약성 임대인 수가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채충철 기자